

타운홀 미팅 개최, 학생 편의 관련 안건 다수

제2회 한성대학교 타운홀 미팅(이하 타운홀 미팅)이 지난 4일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대학본부 관계자 16명과 학생대표 15명 등이 이번 타운홀 미팅에 참여했으며, ▲학사 부문 ▲수강신청 및 수업 부문 ▲생활 및 복지 부문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학사 부문 안건

- 능력개발장학금 재계 요청
- 교양 강의 분야 신설 요구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는 능력개발장학금 관련 안건을 제시했다. 능력개발장학금은 『장학금규정』에 따라 사회발전에 기여할 제반 능력을 갖춘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김동규(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장학금규정』에 능력개발장학금 항목이 포함돼 있으나 본교 홈페이지에는 안내되지 않고 있다”며 “능력개발장학금 중 취업준비를 준비하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학의 우수자 재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상혁 학생처장은 “능력개발장학금은 2016년 취업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토익이나 캡스톤 디자인 점수에 따라 부여한 장학금”이라며 “해당 장학금의 보장은 어렵지만 성적이나 토익 등의 점수가 우수

한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병희 교학부총장은 “외국어시험 등의 교육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교육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다”며 “해당 장학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교양 과목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장문수(컴공 4) 총학생회장은 “일반교양, 일반선택, 선택필수교양 등의 교양 교과목에서 매년 동일한 강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 교양 교과목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강의의 개설을 요청했다. 신영현(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학장은 “매년 4개 정도의 교양 강좌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으나 학생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도라고 분석했다”며 “학생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양 교과목 강좌 개선 및 개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강신청 및 수업 부문 안건

- 수강신청 취소 지연제 개선 요청
- 사이버 강좌 과목 선택권 요구
- 인원수에 적합한 강의실 배정 촉구
- 녹화강의 재활용 문제 개선 재요청
- 블렌디드 수업 축소 논의



▲ '제2회 타운홀 미팅'이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총학은 올해 하반기에 도입된 수강신청 취소 지연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김채은(사회과학 3) 부총학생회장은 “새롭게 도입된 수강신청 정정 과정에서 수강해야 하는 전공 수업을 전 학년이 동시에 신청해 불편을 느끼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수강신청 취소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김진환 교무처장은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 의견을 듣고 취소된 강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루 3번 동기화되도록 대처했다”며 “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은 상당 부분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는 사이버 강좌 관련 사항을 건의했다. 김병진(기계전자 4) 학복위원장은 “사이버 강좌의 과목이 폐지될 경우 과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목 취소 시 수강을 신청한 학생에게 수강 선택권을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박용훈(학사지원팀) 팀장은 “관련해 지난 학기에도 교양대학을 통해 협조를 당부했으나 조치가 미흡했다”며 “교양대학과 협의해 수강신청 강좌 선택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수업 인원수에 맞는 강의실 배정이 요구됐다. 김서연(ICT 3) 디자인대학 학생회장은 “각 수업 인원수에 맞지 않는 강의실 배치로 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는 학생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김 처장은 “수강신청 인원을 고려해 강의실을 배치했으나 담당 교수 재량으로 추가 인원을 허락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수강 인원이 추가로 허가된 경

우 분반을 개설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팀장은 “미래관 지하 1층에 PC 실습실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래된 온라인 녹화강의 재사용 문제에 대한 강의 최신화 요청도 재차 이뤄졌다. 함현지(문콘 2)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 부학생회장은 “교양 과목에서 녹화강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강의가 재활용되며 수업 목표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영돈(스마트원격교육센터) 센터장은 “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교수자가 자발적으로 오래된 강의를 사용하지 않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생긴 블렌디드 수업 축소를 건의했다. 김 부회장은 “총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생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강의 재사용, 대면강의와 같은 수업 반복, 소문 불편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이번 학기부터 강의 평가 설문조사에 블렌디드 수업 방식과 온라인 수업 방식에 대한 별도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업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2면에 계속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2차 대의원총회 진행, 비대위 회칙 및 감사세칙 개정

'2024학년도 하반기 2차 정기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지난 14일 탐구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일상운영비 상한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칙 제정(안)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발의된 모든 안건은 재적 대의원 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제개정된 학생회칙과 감사시행세칙은 가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2025학년도 학생자치기구총선거'부터 적용된다. 학생회칙과 감사시행세칙의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랙-학과(부) 학생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상운영비의 상한선 및 최대 사용 금액이

정의됐다. 일상운영비는 소액물품구입비 등 부서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다. 트랙-학과(부) 학생회 예산안 중 20%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대 사용 금액은 트랙 학생회 20만 원, 학과(부) 학생회 40만 원이다. 예산안 중 20% 금액이 최대 사용 금액을 초과해 책정될 경우 상한선을 최대 사용 금액으로 제한한다. 재적 대의원 수 12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학생회칙 제13장 비대위 회칙이 제정됐다. 비대위는 자치기구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중 하나 이상의 자치기구 선거가 무산되거나 정부 대표자가 탄핵 혹은 결위됐을 때 비대위가 구성될 수 있다.

김동규(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이번 총선거에서도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과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에서 출마하지 않아 비대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중앙운영위원회 비대위 관련 조항을 우선적으로 제정한 후 단과대학 비대위를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전했다. 해당 안건은 재적 대의원 수 13명 전원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감사시행세칙도 개정이 이뤄졌다. 감사시행세칙 제19조 제4항에서 피 감사기구가 제출해야 하는 감사자료가 사업별, 날짜별 예산 집행표에서 결산서로 변경됐다. 예산 집행표의 경우 사업 분류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 집행액이 기입돼 학생회비 및 기타 수입금의 사용처

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면 결산서는 사업 관련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사용처를 밝힐 수 있다. 해당 조항의 개정은 재적 대의원 수 14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감사시행세칙 제28조 제3항과 제5항도 개정됐다. 제3항은 사용내역 항목 중 경고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쓰인 학생회비 전액을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의 기준은 영수증 한 장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해당 조항은 경고가 2회일 경우 단위 제정의 1%를 '환불'조치한 이후 경고가 1회 증가할 때마다 2%씩 '환불'액이 증액된다고 개정됐다. 또한 제5항의 경우 경고를 1회 이상 받은 사업의 개

수가 전체 사업 개수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 쓰인 학생회비 전액을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기타 세부적인 징계의 수위는 중앙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고 변경됐다. 제3항은 재적 대의원 수 14명 중 찬성 11표, 제5항은 전원 찬성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감사시행세칙 제28조 제6항은 신설됐다. 학생회비 횡령, 배임 유용 또는 그 밖에 중대한 사안의 경우 중앙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할 수 있다는 항목이다. 이는 재적 대의원 수 14명 만장일치에 따른 결정이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교수회 학칙 개정 반발한 교수협의회

교수협의회가 교수회 관련 학칙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수협의회는 『한성대학교 학칙』 제18장 교수회 학칙 개정이 교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진행됐기 때문에 학칙 개정을 철회하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대학본부는 학칙 개정을 통해 교수회가 대표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학칙 개정 반대한다는 의미로 지난 10일까지 상상관, 연구관 등 교내 곳곳에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자보를 통해 교수협의회는 구체적으로 '교수회 성격 전환 시 전체 전임교원의 동의 필요', '교수회 관련 학칙 개정 시 교수 대표

기구의 동의 필요', '자문기구로서의 교수회와 교수 대표기구로서의 교수회 분리', '총장이 교수를 대표하는 장(長)이 되는 것에 대한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개정된 학칙에 따르면 교수회는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기구로 성격이 전환됐으며, 총장이 교수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전 『한성대학교 학칙』에서 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장이 소집해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만 규정했다. 지난 25일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대학교에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교수회를 둔다'와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는 조항 등이 추가됐다. 또한 기존

에는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로 규정돼 있던 조항을 학사의 관리 및 운영, 교육, 연구 등을 심의한다고 구체화했다. 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적 인원 과반수가 출석했을 시 개최한다.

교수협의회는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교수들의 자치기구지만,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과거 대학평의원회 평의원과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의 교수 대표를 선출하기도 했다. 현재 전체 교원의 70% 가량이 가입했다.

교수협의회 측은 학칙 개정을 통해 교수회의 성격을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교수회의 성격을 전환하려면 전체 전임교원에

게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기구로 교수회의 성격을 전환하면서 총장이 교수회의 의장이 되는 것을 함께 지적했다. 교수를 대표하는 장(長)을 총장이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귀욱(교수협의회) 회장은 “학칙 개정 전처럼 교수회가 총장의 자문기구라면 총장이 의장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교수회 의장을 총장이 역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내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 측은 교수회 학칙 개정이 총장에게 안건의 결정권이 집중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

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수회 학칙 개정 후 학사, 교육 등 안건 처리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김진환 교무처장은 “교수회 학칙 개정을 통해 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수협의회는 학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관련한 피켓팅 등 단체활동은 계획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현재 대학본부 측에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아직까지 대학본부로부터 연락은 없다”고 밝혔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학생 의견 다방면으로 고려할 것

생활 및 복지 부문 안건

- 경기도 판교 캠퍼스 참여 불가
- 학생 식당 메뉴 다양화 요청
- 스쿨버스 운행 시간대 확장 요구
- 재학생 주차장 혜택 증진 불가
- 학술정보관 시설물 교체 예정
- 시험기간 열람실 24시간 확대 운영
- 학술정보관 듀얼모니터 설치 완료
- 노후화 건물 자동 방향제 비치 요구
- 금연구역 규제 및 계도 촉구
- 동아리방 확충 및 소음 개선 재요청
- 게시판 홍보 포스터 관리 제기
- 공학관 건물 외벽 표기 재요청
- 문학문화콘텐츠학과 학생회실 요구
- 동아리 공간 보수 예정
- 동아리 지원 증진 요청
- 교내 풋살장 학생 우선제 실시 예고

총대 측은 대학 복지 확보를 위해 경기도 판교 캠퍼스 사업 참여를 건의했다. 판교 캠퍼스는 제3관교 테크노밸리에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대학의 첨단산업 관련 학과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안정적인 인재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추진한다. 김 의장은 “본교가 제3관교 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설명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문석 기획조정처장은 “강의실이나 각종 편의 시설 등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설명회에 참석했으나 해당 사업과 본교의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

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학기 제기된 학생식당 메뉴 다양화 요청도 뒤를 이었다. 이지우(인문 3)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이하 인문예술대) 부학생회장은 “지난 학기 요청으로 채식 위주의 메뉴가 추가됐으나 여전히 한식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특정 계절에 맞춘 시즌별 메뉴 등 학생들이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철우 총무부처장은 “학생대표와 식당 업체 간의 논의를 통해 메뉴 다양화와 가격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디자인대학은 스쿨버스 시간대 확장을 건의했다. 학기 중 스쿨버스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행되고 있다. 김 회장은 “학생의 수업이 많이 진행되는 시간대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나 오전 11시 30분까지만 스쿨버스가 운행돼 학생들이 등교에 불편을 호소한다”고 토로했다. 박 부처장은 “이번 학기부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스쿨버스를 수시 운행 중이지만 해당 시간대에는 점심시간 및 휴게 차량 점점으로 인해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학생들이 등교하는 빈도가 높은 시간대에 스쿨버스 운영을 요청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학복위는 재학생 주차장 혜택 증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 위원은 “지난 5월부터 한성여고 주차장에서 주차비 종일권을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며 “재학생들만이라도 혜택을 받도록 건의한다”고 전했다. 박 부처장은 “1만 5천 원인 주차비 종일권 지원이 1만 원에서 5천 원만 지원되는 것”이라며 “7, 8년간 주차비를 동결했거나 외주업체 불황으로 인한 지원 변경 사안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학술정보관 시설 개선 요청 사항도 존재했다. 김 의장은 “다른 층에 비해 학술정보관

4, 5층에는 멀티탭이 일부만 설치돼 있어 학생들의 이용률이 적다”며 콘센트가 구비된 책상으로 교체를 요청했다. 권용구(학술정보팀) 부팀장은 “5층 자료열람실 책상을 개인용 콘센트와 조명이 설치된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그 외의 열람실 개선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는 학술정보관 6주차, 13주차 시작일부터 시험 기간 종료 시점까지 열람실 24시간 운영을 요청했다. 김진형(사회과학 4) 사과대 학생회장은 “이번 중간고사 기간의 경우 6주차 시작일인 월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24시간 운영이 시작돼 기한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권 부팀장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이번 학기부터 운영을 시행하겠다”며 “이후 이용률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사과대는 이어 학술정보관 듀얼모니터 좌석 수 확충을 위한 모니터 추가 설치도 요청했다. 권 부팀장은 “요청 사항을 전달 받은 이후 관련 장비를 도입해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창의대는 노후화된 건물 화장실의 수압 약화 및 악취로 인한 조치를 건의했다. 김희원 회장은 “노후화된 건물 중 지선관 및 탐구관, 지선관 화장실 내부 시설이 낡아 환기가 이뤄지지 않고 수압이 약해 악취가 발생한다”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자동 방향제 설치와 수압 문제 해결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 부처장은 “노후화된 건물 화장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노력 중”이라며 “과거 방향 기기를 설치한 적이 있으나 방향제 향기가 민감한 학생이 있어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IT공과대학(이하 공대) 학생회는 금연구역에 대한 규제를 요청했다. 허준범(기계전자 3) 공대 부학생회장은 “상상파크와 창의관 뒤편은 금연구역임에도 재떨이가 설치돼

있어 흡연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문제가 빈발한다”며 “재떨이를 철거하거나 흡연구역 추가 지정, 금연구역 흡연문제의 강력한 제재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고 토로했다. 박 부처장은 “흡연구역을 설치할 때는 건물에서 10m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며 “사실상 본교 건물에 흡연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없어 재떨이를 철거하고 금연구역 흡연을 계도해가겠다”고 답했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작년 2학기에 제기된 동아리방 확충과 소음으로 인한 동아리방 개선을 한 번 더 요청했다. 임정아(사회과학 3) 동연회장은 “전번 동아리방 개선 관련 건의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아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간 확충을 위해 학사복 관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성관 세미나실을 검토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상혁 학생처장은 “대부분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안으로 제시한 공간에 대한 실사를 통해 진단 이후 관련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인문예술대는 교내 게시판 홍보 포스터 관리 요청사항을 학생처에 전달했다. 현재 학생 홍보 포스터는 『교내 홍보게시물 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학생장학팀의 검인 후 지정 게시 장소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김형기 회장은 “홍보 포스터에 학생장학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거나 부착 기한을 초과하는 등 부분별하게 홍보 포스터가 게시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홍보 포스터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학생장학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많은 학생 및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포스터를 붙이고 있어 통제가 어렵다”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대는 공학관 건물 구분을 위한 공학관 A동, B동 건물 외벽 표기를 지난 학기에 이어 한 번 더 요청했다. 박 부처장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선정에 따라 이번 겨울방학 때 건물이 리모델링될 예정”이라며

“표기 명칭, 부착 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창의대는 문학문화콘텐츠학과 학생회실 공간 마련을 재차 요청했다. 한국어교육트랙과 공동으로 학생회실을 사용 중인 상황이 지속됐다는 이유에서다. 김희원 회장은 “올해 기준 3학년까지 존재하는 문학문화콘텐츠학과가 내년에 4학년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면 공간이 개설돼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중집(학생장학팀) 팀장은 “본교 학생자치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학부 통합 등을 통해 마련된 공간을 먼저 고려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연은 시설 훼손으로 인한 동아리연습실 및 체육분과실 공간 보수 및 관리를 요청했다. 차예빈(인문 2) 동연부회장은 “체육분과실에서 누수가 자주 발생하고 동아리연습실은 벽이 찢어지고 바닥이 들린 상태”라며 “동아리연습실 보수와 더불어 두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요청한다”고 논했다. 조 팀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보수 조치하고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동연은 동아리 지원 관련 사항 증진을 건의했다. 동아리 회장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을 제시했다. 임 회장은 “동아리 부원 및 활동 증가에 따라 동아리 회장 임무가 많아지고 높은 성적을 내는 동아리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에 이 처장은 “동아리 회장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확답하기 어려우나 우수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총학은 지난 학기에 이어 교내 풋살장 학생 우선제 실시를 한 번 더 요청했다. 장 회장은 “매달 초 셋째 주 평일에 학생만 우선적으로 풋살장을 대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외부 대관보다 학생을 먼저 고려해 학생 우선제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학생들과의 소통을 실현한 자리, ‘Lunch with the President’

지난 11일, ‘Lunch with the President’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는 본교 재학생과 총장이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기 위해 열렸다. 본 행사는 ▲식사 ▲질의응답 ▲기념촬영 및 기념품 배부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자리에는 이창원 총장을 포함한 대학본부 관계자 6명과 재학생 7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상상관 12층 ‘케이키친 한상’에서 식사한 후, 9층 대회의실에서 다과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학교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교양필수 수업 운영 시간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김민서(AI응용 1) 학생은 “야간학생이라 오후 9시경에 시작되는 교양 수업을 듣고 귀가하면 오후 11시가 넘는다”며 “교양필수 수업에 한 해 시간대를 앞당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명희 교학부총장은 “야간 학생의 시간표 설정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상상력교양대학 및 교무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혁 학생처장은 “K-MOOC 교과목을 통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양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며 “관련 사항을 더욱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교내 와이파이 연결 개선에 대한 요청도 언급됐다. 이지섭(사회과학 3) 학생은 “교내 와이파이 사용 중 끊기는 것을 다수 경험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구현(학생장학팀) 팀원은 “정보화팀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개인이 갖고 있는 기기가 최신화돼 있지 않을 경우 연결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상관 3층 통합기자재실을 방문하면 기기 업데이트 등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기간 열람실 24시간 운영 시간 및 장소 확대 요청도 이어졌다. 전선영(인문

3) 학생은 “작년 시험기간에는 상상파크가 24시간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험기간 24시간 운영 장소 확장이나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양진(학생원스톱지원센터) 센터장은 “학생이 야간에 잔류할 경우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상상파크와 같이 근로학생이 없어도 잔류할 수 있는 공간을 탐색하고 캠퍼스의 협조를 얻는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리 지원 확충에 관한 의견도 제기됐다. 최태민(사회과학 4) 학생은 “가입한 동아리에서 본교 트랙과 협업해 활동한

경험이 있다”며 “동아리 다양성 등 동아리 지원을 확충해 타 동아리도 생산적인 활동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장 교학부총장은 “동아리 측이 요구한다면 외부 전문가 초청, 취업 특강 등을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 학생은 “질의한 사항에 대해 즉시 답변을 받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며 “향후에도 이같은 자리가 마련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트랙설명회

지난달 29일 낙산관에서 ‘2024년 전공트랙 진로 설명회’(이하 트랙설명회)가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 모두에게 비교과 포인트가 부여됐으며, 추첨을 통해 상품 지급도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단과대학 내 트랙·학과(부)와 학사지원팀 등 총 50개의 부스가 운영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부스에 상주하는 학생, 교수 등의 운영진과 트랙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해당 전공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부스 방문 수에 따른 상품 지급도 이뤄졌다. 가장 많은 부스를 방문한 학생을 단과대학 별로 각 1명씩 총 6명을 선발한 후, 추첨을 통해 1명에게 ‘무선 헤드셋’을 지급한다. 또한 전공트랙 부스를 4개 이상 방문한 학생 중 100명을 뽑아 ‘스타벅스 E-Gift Card



▲ ‘UX/UI디자인트랙’ 부스에서 트랙 관련 정보를 얻는 학생들

3만 원권’을 증정한다. 1개의 부스를 방문할 때마다 비교과 포인트 5pt가 제공됐고 1인당 최대 20pt까지 제공됐다.

행사에 참여한 박지연(IT 1) 학생은 “트랙 설명회를 통해 어떤 트랙을 선택할지에 대한 갈피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패

션디자인트랙 부스를 운영한 허윤석(매선 4) 학생은 “자신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기 위해 방문한 학생들이 많았다”며 “트랙의 지식을 최대한 많이 말해주고 싶었다”고 운영 소감을 밝혔다.

허윤호 기자 heo109@gmail.com

본교 강북횡단선 서명운동 동참

본교가 ‘강북횡단선 신축 재추진 촉구 서명운동(이하 서명운동)’을 지난달 22일부터 진행 중이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에서 성북구 월곡·종암·길음·정릉, 서대문구 홍제역,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을 거쳐 양천구 목동역까지 이어지는 경전철이다. 정릉을 기준으로 청량리역까지 9분, 삼암까지 20분, 목동역까지 30분으로 이동 시간이 현재의 1/3 수준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10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될 서명운동의 결과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성북구청 등 강북횡단선 관련 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본교는 지난달 21일 열린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대학총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서명운동의 동참을 결정했다. 서명운동은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 성북구 내 5개 대학과 함께 진행된다. 각 대학은 재학생과 교직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캠퍼스 내 서명운동과 더불어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밝혔다.

장영우 총무처장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선호하고, 이는 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성북구의 교통망 확대는 본교 인지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북구청 관계자는 “강북횡단선은 성북구의 열악한 교통 문제를 해소할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서울시 전역에 도시철도 통학 편의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불안정한 도약의 첫 걸음



그림 : 황서연 기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도입된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운영에 직격탄을 맞았다. 작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이 11%를 넘어가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율은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7.8%에서 11.2%까지 상승했으며, 시행 1년 2개월 만에 약 16만 명이 중도 해지했다. 이석기(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청년도약계좌 적금에 가입하는 청년이 많다"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청년도약계좌에 필요한 저축액을 마련해야 하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마련된 금융상품이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해진 개인 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입 가능하다. 5년 간 매달 40만 원 이상 7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금리와 정부의 기여금을 합한 이자가 붙는 형태다. 개인 소득별로 기여금 이자의 비율이 정해진다. 가입자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납부한 저축액만큼 기여금 이자가 해당 저축액에 적용된다. 따라서 가입자는 자신이 납부한 저축액에 정해진 이자가 붙는 형식으로 정부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저축액에 부여되는 이자율에 따라 가입자는 한 달에 최소 2만 1천 원에서 최대 2만 4천 원까지 기여금 형태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여금 이자가 적용되는 저축액의 한도를 확장해 가입자가 받는 기여금을 최대 3만 3천 원까지 높일 예정이다. 엄윤성(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청년도약계좌는 저축을 통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준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여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이 얻는 이익은 크게 은행의 금리와 정부의 기여금이다. 하지만 현재 기여금은 한 달에 최대 2만 4천 원까지가 한계다. 이는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저축하는 것에 비해 액수가 적다고 지적된다. 타 세대보다 비교적 불확실한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저축을 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덕수(한림대학교 금융재무학과) 교수는 "5년 동안 저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과 기여금의 액수가 적다는 단점에 비해 많은 청년이 가입한 것"이라고 전했다.

각 은행별로 받는 우대 금리의 조건 기준이 청년에게 까다롭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은행 카드사의 실적을 일정 부분 이상 채워야 하는 등 각 은행별로 우대 금리 기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A 은행은 급여 해당 은행의 입출식 계좌로 월 50만 원 이상 급여 이체를 하고 월 10만 원 이상 은행사의 카드를 결제한 실적을 채워야만 1%의 우대 금리가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에 적금을 넣는 것뿐 아니라 은행의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 또 다른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다. 서진형(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우대 금리의 요건을 너무 어렵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실질적인 우대 금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희망고문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액 대부분이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이월된다. 지난해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은 3,678억 100만 원이었지만 3,03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이월됐다. 이월된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며 추후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사업액은 정부의 기여금 지원과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가입자의 이자 소득을 지원한다. 서 교수는 "정부에서 예측한 가입자 수만큼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않아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여금이 부족한 문제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정부의 기여금에 대한 액수가 줄어든 점에서 기인한다. 청년도약계좌 사업 계획이 진행된 초기에는 정부의 기여금이 현재보다 높게 책정됐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정부 기여금으로 매달 10만 원에서 40만 원의 기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마다 입장 및 의견이 상이해 초기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덕수 교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보다 기여금의 액수가 줄어들었다"며 "기여금 액수가 기존과 다른 부분은 이해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은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미비해 은행에서는 자율적으로 우대 금리 조건을 설정했다. 청년도약계좌로 장기적인 청년 고객을 유치하고자 함이 은행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은행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에게 지속적인 금리를 제공해야 하기에 은행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급여 이체나 카드 사용 등을 청년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덕수 교수는 "청년도약계좌도 금융상품이기에 고객과 은행이 양방향으로 이익을 얻어야 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고객을 유치한다는 이점이 있기에 우대 금리 조건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초기 가입자 수를 예측하는 데 실패한 것이 과한 예산 이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애당초 청년도약계좌 예상 가입자 수를 306만 명으로 측정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2024년 8월 기준 143만 8000천여 명에 그쳤다.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며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된다. 이아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동과복지연구센터) 센터장은 "청년도약계좌로 얻는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청년들의 수요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정부 기여금의 액수를 높여 더 많은 청년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액을 정부 기여금으로 돌린다면 청년들에게 가는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 김지환(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불용되는 예산이 많기에 정부의 기여금에 대한 예산을 증대시키는 등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우대 금리 조건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한정시켜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된다. 우대 금리 조건을 완화하도록 규정하며 청년이 은행을 통해 받는 금리를 한정하기 위해 은행에 협력을 구해야 한다. 정부의 기여금을 높여 은행의 우대 금리 조건을 완화한 대신 낮아진 우대 금리를 보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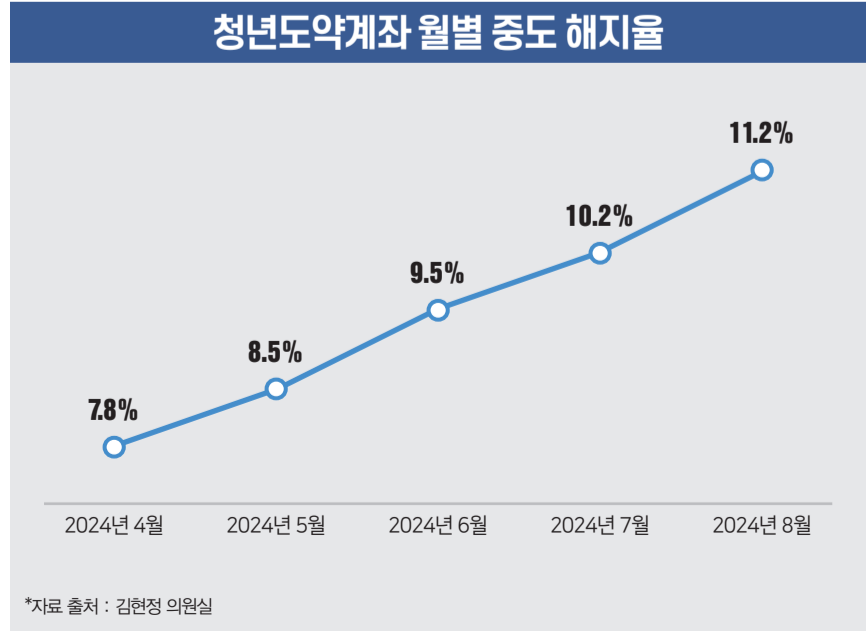
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석기 교수는 "은행에서 제시한 우대 금리 조건을 급여 이체만으로 한정시킬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대신 정부의 기여금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예산의 과도한 이월을 막고자 더 많은 청년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도하는 데에도 해당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혜택을 지급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실질하게 납입을 유지하는 청년들에게 개인신용 등급 평가 시 5~10점의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서 교수는 "정부의 지원이 더욱 확대돼 청년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지 않고도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청년도약계좌 사업에서 시행 중인 예·적금 담보부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는 가산된다.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입거나 급하게 적금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삼은 대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덕수 교수는 "담보부대출에 관해 청년들은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확대돼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등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담보부대출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덕수 교수는 "법과 제도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며 "기여금이 축소되는 등 타당성 면에서 청년도약계좌는 보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도 해지율 : 적금 가입자 중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적금을 해지하는 이들의 비율





〈편집자주〉

‘20대가 꼭 알아야 하는 경제 상식’ ‘경제 초보를 위한 경제 개념 10분 요약’ 인터넷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경제 관련 콘텐츠들이다. 대학생이 됐으면 경제개발 상식 정도는 쌓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관심을 가져보려 해도 까다로운 경제 용어가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겨우 이해했다 하더라도 경제 뉴스 한번 읽어볼까 하면 공부했던 기억이 휘발되곤 한다.

경제주체로서 현명하게 소비하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사회 전체의 경제 흐름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려면 경제 원리를 알아야 한다. 나아가 이를 사회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로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금제 6,900원.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 서비스, 일명 ‘알뜰폰’의 요금제 가격이다. 알뜰폰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다. KT·SKT·LG유플러스로 이뤄진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가 알뜰폰 시장마저 점령했다. 특정 기업들이 장악한 ‘과점시장’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힌다. 이에 소비자의 선택을 보호하고자 정부가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어떤 특징을 갖기에 관리가 이뤄지는 것일까. 다양한 시장 구조와 알뜰폰 시장 내 과점의 초래한 상황을 훑아보자.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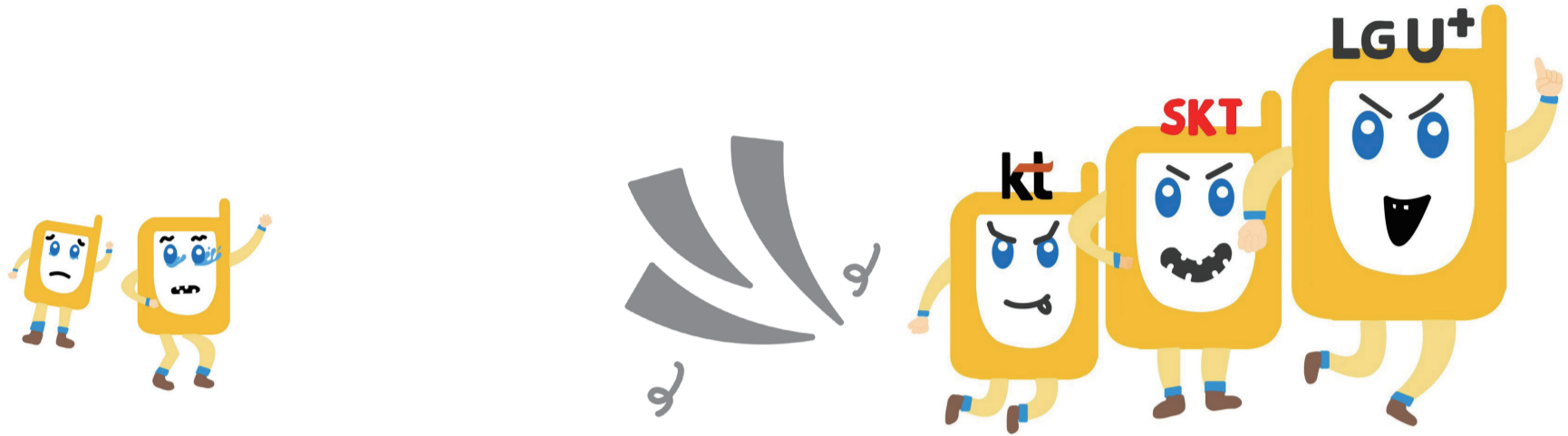


그림 : 황서연 기자

알뜰함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장악된 시장

기업이 펼치는 전략적 경쟁의 장

경쟁이 사라진 알뜰폰 시장

재화나 용역,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된다. 경제학에서 시장은 가게, 기업 등의 경제주체가 상품을 교환하는 추상적 공간을 의미한다. 시장에는 다양한 상품과 경제주체가 존재하기에 시장의 형태도 다양하며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 간 경쟁 방식도 각각 다르다. 이때 시장은 공급자의 수, 시장으로의 진입장벽 등 경쟁이 이뤄지는 정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이윤주(울산대학교 경제학전공) 교수는 “시장의 형태에 따라 기업과 정부는 경제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학의 여러 시장 형태 중 ‘완전경쟁시장’은 수많은 기업이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곳이다. 해당 시장에는 상품을 공급하는 여러 기업과 이를 사고자 하는 가게, 즉 소비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다수의 경제주체 간 활발한 경쟁은 단일 기업이나 소비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한다. 이에 모든 경제주체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완전경쟁시장은 상품 공급과 소비자 구매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에 이상적인 시장의 형태라고 분석된다. 이 교수는 “완전경쟁시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완전경쟁시장과 같은 효율적인 상품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 상품의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독점시장’이 이에 해당한다. 독점시장은 한 개의 기업이 상품을 공급하며 시장 전체를 지배한다. 독점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은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이는 기업이 독점한 자원이나 기술을 갖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한다.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단 하나이기 때문에 단일 기업의 결정으로 상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김규현(예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독점시장에서 단일 기업은 구매자의 상품 구매 욕구, 수요량에 맞춰 독점가격을 형성하는데 완전경쟁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해 초과이익을 얻는다”고 전했다.

단일 기업이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시장과 달리 다수의 기업이 서로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며 경쟁하는 ‘독점적 경쟁시장’도 존재한다. 이 시장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서로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며 시장 지배력을 나누기 때문이다. 모두가 가격 결정권을 갖지만 치열한 가격 경쟁을 의식해 과도한 가격 인상은 어렵다. 또한 차별화된 상품을 바탕으로 기업의 시장이 진입이 비교적 자유롭다. 해당 시장에서 기업은 판매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취한다. 예를 들면 화장품 브랜드는 비슷한 상품을 공급하지만 상품의 특색과 마케팅을 통해 서로 다른 소비자층을 확보한다. 김 교수는 “독점적 경쟁시장은 기업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롭기에 완전경쟁시장과 유사하지만 제품 차별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 나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단일 기업이나 다수의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지 않

고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시장’은 독특한 시장 구조를 형성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나 자동차 산업 등에서 확인되는 과점시장은 다수의 크고 작은 기업이 존재하지만, 그중 일부 대기업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에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구성되고 과점 기업은 서로의 행동을 고려해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대기업 A가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 대기업 B나 C 등은 이 상황에서 각 기업의 생산 상황에 맞게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김 교수는 “과점시장에서는 기업 간 가격 조정이 빈번하는데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기에 서로의 가격 및 제품 전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간 상호작용과 전략적 판단 과정에서, 대기업 A가 상품의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경쟁 상대인 대기업 B와 C가 반드시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 ‘굴절수요곡선의 모형’에 따르면 A가 가격을 인상할 때 대기업 B와 C는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A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빠져나가는 고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A가 가격을 인하하면 B, C는 가격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가격을 동결할 수 있지만 고객을 유치하고자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각 기업은 가격 조정에 신중을 기하며 기업의 생산비용이나 수요조건에 변화가 생겨도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선택을 취하기도 한다. 김 교수는 “굴절수요곡선의 모형에서 각 대기업은 광고, 품질 개선 등의 비가격경쟁의 전략을 세우며 소비자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과점시장에서 서로의 행동을 고려하며 가격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과점시장 내 기업이 담합해 실질적으로 독점체제를 구축하는 현상도 확인된다. ‘카르텔의 모형’은 담합을 통해 형성된 카르텔 전체의 이윤 극대화를 시도한다. 카르텔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생산 목표량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업이 생산할 양을 분배한다. 카르텔을 통해 기업은 상품 가격을 올려 이익을 얻지만 카르텔을 형성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 같은 기업 간 가격 담합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가격을 형성해 소비자 피해까지 초래한다. 이 교수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기에 카르텔 현상이 발생하며 불공정한 상품의 가격 설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과점시장에서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기업의 담합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정부는 과점기업을 규제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시장의 효율성 증진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여러 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부의 규제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격과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 교수는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과점시장을 관리하고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망의 품질을 유지하며 저렴한 요금제로 제공되는 통신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이동통신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통신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통 3사의 기존 이동통신 시장 과점으로 요금제가 높게 형성됐다는 지적과 통신망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시장의 특성상,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최근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가 ‘과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뜰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총합이 전체 알뜰폰 시장 가입자 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상휘(국민의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알뜰폰 시장 내 이동통신사 합산 점유율 추이’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알뜰폰 시장 내 이통 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47%로 나타났다.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알뜰폰 회선과 사물인터넷(IoT)이 함께 책정되는데 사물인터넷 점유율을 제외하면 이통 3사가 알뜰폰 시장의 점유율 60~7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알뜰폰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장 내에서 각 이통사 별로 한 개의 자회사만을 진출시킨다는 원칙이 있으나 이통 3사가 이를 어기고 여러 자회사를 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하며 공정경쟁 의무 조건으로 ‘1사 1자회사’ 원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해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상황으로, 현재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는 5곳이다. 신철원(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부장은 “모기업의 자원을 활용해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통 3사의 자회사 제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알뜰폰 시장 내에서 이통 3사의 자회사가 가격 자체를 담합하며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통 3사가 알뜰폰 중소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망(이하 망)을 판매하면 중소 사업자는 이 망을 도매가로 구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이동통신망에서 가격 담합 혐의를 갖고 있는 이통 3사가 자회사의 위치를 공고히하기 위해 망 도매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는 지적이다. 최수진(국민의회)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약 3조 4,000억 원~5조 5,000억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알뜰폰 중소 사업자에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기에 비합리적인 경쟁 시장이 형성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는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이통 3사는 보조금을 활용해 알뜰폰 시장에서 막대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김철인(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소비자정보유통연구실) 책임연구원은 “이통 3사에만 보조금이 지원되며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알뜰폰 시장 내에 진출하는 자회사의 개수를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가 적절히 운영돼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통 3사가 자회사를 초과 운영한 경우 사업 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법적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체 점유율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자회사 개수는 규제되지 않는 실정이다. 신 부장은 “이통 3사는 알뜰폰 시장 내에서 자회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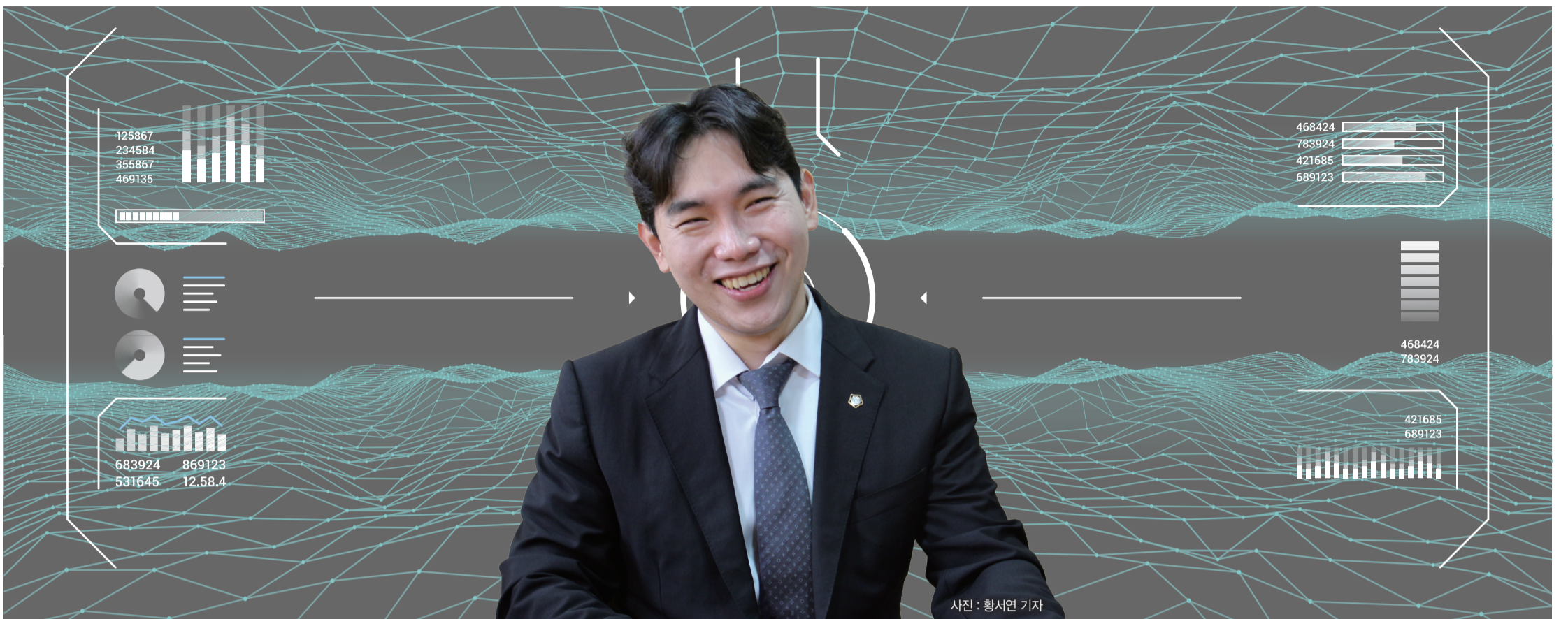
담합 문제는 알뜰폰 시장에서 가격 책정을 이통 3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통 3사는 망을 갖고 있어 중소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입장임에도 정부는 이통 3사에게 중소 사업자의 망 도매 가격 설정권을 제공하고 있다. 김 책임연구원은 “이통 3사가 도매 단가를 정할 수 있어 담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 문제는 이동통신 시장 내 이통 3사의 영향력을 간과하며 기존 이동통신망 시장과 알뜰폰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기인한다. 기존 통신망에 대한 지원 정책은 보조금을 활용해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이통 3사의 추가적인 자금 확보 수단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신 부장은 “이통 3사와 달리 알뜰폰 중소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통 3사의 자회사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통 3사가 1개를 초과해 설립한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에 비례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침이다. 이통 3사 자회사의 거대한 시장 지배력은 알뜰폰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상황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책임연구원은 “이통 3사의 자회사 개수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통 3사가 설정하는 망 도매 가격의 상하한선을 규정함으로써 독자적인 가격 책정으로 인한 이통 3사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통 3사가 도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가격 상한선을 설정함과 동시에 하한선을 규정해 망 도매 가격 정보를 중소 사업자에게도 전달해 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도매 가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망 도매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가 요구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통신 시장에서 알뜰폰 시장과 중소 사업자를 고려한 보조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소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배정하며 이통 3사에게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중소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선행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 부장은 “알뜰폰 업체도 이통 3사와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 내에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변호사가 된 게임 덕후, ‘덕업일치’를 이뤄낸다

게임 전문 변호사 이철우

‘219억 원 상당의 캐시 지급’ 게임사의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80만 명의 게임 이용자에게 보상을 결정한 금액이다. 게임사가 상당한 금액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보상하게 해준 조력자는 과연 누구일까.

게임 이용자의 곁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가 있다. 바로 이철우(35) 변호사다. 30년간 다양한 게임을 섭렵해온 그는 게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게임과 법을 접목시켜 게임 전문 변호사가 됐다. 덕업일치가 아닐 수 없다. 덕업일치는 취미와 직업이 일치된다는 뜻의 용어다. 좋아하는 것을 미래의 직업으로 삼을 수 있지만 덕업일치의 사례는 손꼽을 정도다. 취미가 아닌 직업이 되는 순간부터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게임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는 이 변호사가 말하는 게임이란 무엇일까. 그가 게임 전문 변호사를 목표로 하게 된 이유와 덕업일치를 이뤄낸 선배로서 조언을 듣기 위해 그를 만났다.

게임 속 재판을 현실로

이 변호사는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해왔다. 그가 게임에 처음 빠지게 된 것은 5살 무렵이었다. 당시 그는 생일 선물로 게임기를 받았고, 이때부터 게임에 몰입했다. 그에게 게임은 그동안 다른 매체에서 느낄 수 없던 신선함을 선사했다.

“책이나 영화, 만화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찰하는 느낌이지요. 게임에서는 캐릭터가 제 선택에 따라 움직여 세상을 구한다는 것이 짜릿했어요.”

유년기 시절부터 게임을 좋아하던 그는 게임을 통해 ‘변호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갖게 됐다. 바로 자신이 직접 게임 속 변호사가 돼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법정에서 대결을 펼치는 ‘역전재판’이라는 게임 덕이다. 그는 게임 속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고 어려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다. 또한 그는 ‘역전재판’을 통해 꿈꿨던 변호사의 모습을 현실에서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게임 속 재판에서 승소했을 때 느꼈던 성취감을 실제 소송에서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역전재판을 하면서 사건의 단서를 찾고 결정적인 지적을 하는 과정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게임에는 서커스 단장, 무당 등 여러 인물이 등장해요. 주인공이 곤경에 빠진 그들을 구해주며 다양한 경험을 겪기도 하죠. 역전재판을 통해 인생에 큰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여러 소송에서 이기고 게임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것을 이룬 덕에 어린 시절에 꿈꿨던 변호사의 모습을 실현한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게임을 통해 변호사를 꿈꾸게 된 이 변호사는 ▲이혼 ▲성범죄 ▲음주운전 등 흔히 다루지는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 그만의 분야를 찾고 싶어 했다. 기존에 다

뤄지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호사들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그가 생각했던 분야가 바로 어릴 때부터 그토록 좋아하던 ‘게임’이었다. 게임 전문 변호사라는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은 그에게 걱정과 두려움보다 기대감과 설렘을 안겨다줬다. 게임이라는 분야를 자신만의 전문분야로 개발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 당연하게도 게임 관련 사건을 진행하면 다른 분야의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흥미로웠어요. 사건을 이해하고 의뢰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수월하기도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업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전문 변호사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대형 로펌의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변호사 시장도 레드오션이 됐기 때문에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제가 게임과 법이라는 두 항목을 접목시킨 분야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겠다는 전략이었죠.”

로스쿨을 졸업한 뒤 이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소속 법무담당관으로 들어가 다수의 『게임산업법』 위반 형사 사건을 맡았다. 이외에도 ▲P2E(Play to Earn) 게임 ▲소셜 카지노 ▲NFT가 배출되는 모바일 RPG 게임 ▲불법 개·변조 아케이드 게임 등 다양한 게임 관련 소송을 처리했다.

“스포츠 도박에 가까운 게임이나 복권을 굶고 코인을 지급하는 등의 사행성 게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소송을 많이 맡았어요. 약질 게임을 잡기 위한 수문장 역할을 한 거죠.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게임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걸 막고 싶었어요.”

게임 전문 변호사로서 이 변호사는 ▲게임사 간 저작권 분쟁 ▲소비자단체소송 ▲게임사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간 등급 분류 관련 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다. 최근 그는 게임 관련 법적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소송은 협상력이 약한 소비자를 대신해 법으로 정한 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 행위의 금지·중지를 법원에 구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힘을 쏟기를 희망했다.

“2021년 발생한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이 전형적인 예시예요. 이 사건은 특정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게임사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해 게임 이용자들의 분노를 쏟아낸 사건이에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단체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게임 이용자들의 대리인으로 참여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고요. 워낙 많은 게임 이용자가 해당 소송에 관련돼 있어 책임을 느끼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서 보람차요. 게임 이용자가 소비자단체소송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점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게임사가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게임 이용자 중심의 게임이 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게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게임 산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변호사는 지난 8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21만 명의 청구인의 목소리를 담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었다. 이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헌법소원심판은 게임 이용자와 평론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대한민국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커요. 게임에 대한 검열이 진행될 경우 사전에 어느 정도 검열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적게나마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어 정당하지 않은 규제라는 거죠.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폭력 등이 들어간 콘텐츠의 검열이 심하지 않는데 유독 게임만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해요. 특히 기성세대는 게임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게임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 이용자와 게임사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게임 환경을 만들고 편화돼 있는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통합하기 위해 이 변호사는 지난 1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를 설립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2021년 이래 이어진 각종 게임에 대한 집단 시위와 간담회, 단체소송이 설립의 배경이 됐다. 각 정당에 게임 관련 정책 질의서를 보내는 등 게임 이용자의 시선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1년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게임 이용자 측을 대리하며 메이플스토리나 리니지, 우마무스메 등 다양한 게임의 이용자 대표를 만났어요. 지금까지는 일반인들끼리 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와 게임 이용자 대표들은 협회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고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출범하게 됐어요.”

이 변호사는 게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정책의 수혜자는 국민이며 게임 이용자들 또한 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제1회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가 열린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기준준수 업무에 게임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변호사는 정책 논의의 주체가 게임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면 질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없으므로 그들 또한 게임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탁상공론 형식으로 게임을 많이 경험해본 적이 없는 정부부처 관계자들끼리 게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걸 보고 부아가 치밀었어요. 심지어 게임 이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임에도 왜 게임 이용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건지 의아했죠. 사실상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이들은 게임 이용자인데 말이예요. 저도 계속해서 토론회 등의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노력



▲게임사 확률 조작을 규탄하는 이철우 변호사

중이에요.” 이 변호사는 앞으로 소송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 정책의 연구 등 다른 분야를 통해서도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관련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결국 게임 관련 소송이 없어지는 것이 게임 이용자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소송에 대한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에 각 정당이 보낸 게임 관련 정책 질의서를 통해 각 정당이 어떤 관점에서 게임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에요.”

덕업일치를 해내는 사람의 비결

게임이라는 취미와 변호사라는 직업을 접목시켜 덕업일치를 이뤄낸 이 변호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즐길 수는 있겠지만 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미래에 실패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덕업일치가 지나칠 경우 일과 휴식의 구분이 모호해진다고 그는 말했다.

“덕업일치를 꿈꾸기 전에 한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안정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게 외국어든 자격증이든 탄탄한 기반을 다져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로스쿨이라는 기틀을 세운 뒤 게임 전문 변호사로서의 길을 간 것처럼 말이죠.”

마법처럼 펼쳐지는 분자요리의 미학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연신 화제를 모은 가운데, '분자요리'라는 조리 방식도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 분자요리는 익숙한 재료의 특성과 요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맛과 질감을 새롭게 변형시키거나 전혀 다른 형태의 음식을 창조하는 독특한 요리 기법이다. 친숙한 재료에 어떤 과학이 결합되어 새로운 맛이 탄생하는 것일까.

분자요리는 재료와 음식을 구성하는 분자를 물리·화학 작용을 이용해 변형시키는 과학적 조리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주로 ▲구체화기법 ▲냉동기법 ▲진공 저온 조리법 등이 사용된다. 채현석(한국관광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는 "스페인에서 처음 시작된 분자요리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며 다양한 분자요리 기법들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낮선 기술 속 익숙한 품미

'구체화기법'은 주스 등의 액체를 구 모양의 젤리 형태로 고체화시키는 기술이다. 캐비어(Caviar)와 같은 작은 알의 형태로 만들어지며 주로 파인다이닝(Fine-dining) 등 고급 요리에서 장식의 용도로 활용된다. 구체화기법을 활용하면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를 뿌려먹는 대신 발사믹 식초를 캐비어 형태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최유진(용인대학교 식품조리학부) 교수는 "구체화기법은 오렌지 주스 등의 액체를 캐비어 형태로 만들고 이를 연어 요리 위에 곁들이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액체를 구형으로 만들기 위해 식품첨가물인 '알긴산 나트륨(C₆H₇O₇Na_n)'과 '염화칼슘(CaCl₂)'이 사용된다. 두 식품첨가물 모두 액체와 쉽게 결합하는 특성을 갖는다. 알긴산나트륨은 미역과 같은 해조류에서 추출된 천연 고분자 물질로 분자량이 1만 이상에 달하는 거대한 화학 결합체다. 분자량이 크면 다른 화학반응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가져 물 등의 다른 분자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 염화칼슘은 수분을 용이하게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며 수분과 만나면 서로 엉겨붙는 특성을 지닌다. 채 교수는 "독성이 낮아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알긴산나트륨은 천연 고분자 물질이고 염화칼슘은 해수에 소량 함유돼 있는 이온성 화합물"이라며 "두 물질 모두 다양한 형태로 요리에 이용된다"고 밝혔다.



5

먼저 구체로 맛을 내고자하는 주스, 소스 등 액체를 알긴산나트륨과 섞는다. 추가로 염화칼슘도 물에 녹여 수용액 형태로 만든다. 각각의 수용액은 안정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 '이온화'한다. 이온화는 화학물질이 안정적 인 상태를 찾기 위해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온화는 물 분자의 '극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극성이란 음전하와 양전하가 모두 분포된 분자의 전기적 성질이다. 물 분자는 음전하를 갖는 수소 원자(H)와 양전하를 갖는 산소 원자(O)로 결합된 극성을 띤다. 이 같은 물의 특성은 다른 물질의 분자를 용이하게 분리시키며 이온화한다. 물이 다른 물질의 음전하를 띤 부분은 수소 원자로, 양전하를 띤 부분은 산소 원자 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알긴산나트륨은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Na⁺)과 음이온의 전자를 갖는 알긴산(C₆H₇O₇)_n 분자로 분리되고, 염화칼슘은 양이온인 칼슘 이온(Ca²⁺)과 음이온인 염소 이온(Cl⁻)으로 분해된다. 정진영(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알긴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이 수용액에서 이온화되며 물리화학적 작용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분자가 이온화 과정을 거치면 화학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상태를 얻기 위해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결합하는 '이온결합'이 일어난다. 음이온인 알긴산 분자는 양이온인 칼슘 이온과 결합하고 염소 분자는 나트륨 이온과 결합한다. 이온결합을 이루면 '알긴산칼슘((C₆H₇O₇CaO)_n)'과 '염화나트륨(NaCl)'의 안정적인 분자가 새롭게 형성된다. 정 책임연구원은 "알긴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이 이온화된 이후 칼슘 이온과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치환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탄생한 알긴산칼슘은 물에 녹지 않는 막을 형성한다.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은 여전히 물에 녹아 수용액으로 남아있다. 반면 알긴산칼슘은 칼슘 이온의 강한 결합력으로 인해 물에 녹지 않는다. 분자 사이를 강하게 연결하는 성질을 갖는 칼슘 이온이 알긴산 분자 사이를 끈끈하게 결합시키기 때문이다. 알긴산나트륨이 염화칼슘과 직접적으로 만난 외부에서만 막이 형성돼 내부에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며 구형 젤리가 완성된다. 결과적으로 소금물과 동그란 젤리 형태의 캐비어가 남게 돼 이를 건져서 요리로 제공한다. 최 교수는 "구체화기법을 활용한 캐비어를 섭취하면 젤리 형태의 막을 뚫고 주스 등의 액체가 터져나오며 다른 식감과 미식 경험을 형성한다"고 답했다.

영하 196도에서 피어난 고운 식감

분자요리의 조리방법 중 하나로 '냉동기법'도 자주 활용된다. 냉동기법은 영하 196도에서 액체 형태로 존재하는 액화질소를 활용해 재료를 급속 냉동시켜 조리하는 방식이다. 냉동기법은 냉동시키는 재료와 요리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통상적으로 셔벗(Sherbet), 샐러드 등의 요리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 채 교수는 "사케를 액화질소로 얼려 셔벗 형태의 디저트를 만들어 내는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재료를 천천히 냉동시키는 과정에는 용



6

사진 제공 : 채현석 교수



1



4

사진 제공 : 컴포테이블



2

사진 제공 : 채현석 교수



3

사진 제공 : 컴포테이블

- 1 구형 푸드 데코레이션을 요리에 올려 조리하는 셰프
- 2 구체화기법을 활용한 디저트
- 3 액화질소 하우스 샐러드
- 4 진공 저온 조리법을 활용한 스테이크
- 5 액화질소를 활용해 얼린 디저트
- 6 초장 캐비어를 올린 문어 요리

액의 농도에 따라 분자가 이동하는 '삼투' 현상이 나타난다. 냉동 과정에서 삼투 현상은 용액 내 순수한 물 분자만 얼음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삼투는 용액 속의 용질 입자는 이동하지 않고, 용질을 녹이는 물 등의 용매 입자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며 나타난다. 이에 두 용액의 농도 차이는 줄어든다. 물과 당류가 섞여 있는 소스도 천천히 냉동될 때 먼저 얼기 시작한 부분은 순수한 물 분자만 고체가 되고 남아 있는 용액의 농도는 점차 높아진다. 남아 있는 물 분자가 당 등이 다량 녹아 있는 고농도로 이동하며 삼투 현상이 나타난다. 삼투 현상이 지속되면 기존 얼음 입자 위에 물 분자가 계속 쌓이면서 크고 단단한 얼음 결정이 생겨난다. 장세은(울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동결이 천천히 진행되면 얼음 결정이 커져 육류 조직세포의 파괴도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액화질소를 활용한 냉동기법의 경우 삼투 현상이 중간에 차단되며 작고 고운 얼음 입자가 형성된다. 재료에 액화질소를 부어 냉동하는 과정에서 삼투 현상이 일부 진행되지만 이미 얼음이 생성된 부분으로 물 분자가 향하기 전에 모든 분자가 급속도로 얼어붙기 때문이다. 액체가 아닌 육류, 과채류 등에 냉동기법을 활용할 경우 재료를 구성하는 조직세포도 함께 냉동되며 세포를 구성하는 내부의 수분 또한 빠르게 동결된다. 세포의 구조가 손상되지 않고 수분이 보존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장 교수는 "냉동 시 동결이 빨리 이뤄지면 얼음 결정의 크기가 작게 형성돼 식품의 조직 파괴가 적어 새로운 식감을 선사함과 동시에 맛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온도와 시간이 빚어낸 단백질 변형

수비드라 불리는 '진공 저온 조리법' 또한 분자요리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이 조리법은 고기나 생선 등의 재료를 진공으로 포장한 뒤 섭씨 60도 부근에서 재료를 장시간 가열하며 익히는 방식이다. 섭씨 65도를 초과한 온도에서 가열할 경우 육류의 근육 수축을 담당하는 세포 '액틴'이 변형되며 수축이 활성화돼 고기가 질겨지기 때문에 보다 낮은 온도에서 재료를 천천히 익힌다. 채 교수는 "진공 저온 조리법의 핵심은 육류 단백질 변성을 조절하는 데 있다"며 "특히 고온에서 가열하면 액틴이 수축해 질겨지므로 이를 최대한 늦추며 조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공 저온 조리법은 오랜 시간 식재료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육류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지는 '단백질 변성' 원리가 적용된다. 단백질 변성은 열에 의해

단백질 결합 구조가 약화되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성질이 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채 교수는 "단백질의 구조는 1차부터 4차까지의 입체적인 구조로 구성돼 있다"며 "단백질 변성은 이 구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결합이 끊어져 분자 내 고유한 성질이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단백질의 일종인 '콜라겐'은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진 불용성 단백질이다. 콜라겐은 '아미노산'이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돼 있는데 보다 단단한 근육을 형성하기 위해 여러 아미노산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견고한 단백질 구조를 형성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 사이를 연결하는 '수소결합'이 일어난다. 물이 체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가 결합에 관여하는 것이다. 수소결합을 통해 단백질 구조는 안정성을 갖고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콜라겐이 완성된다.

진공 저온 조리법을 활용하면 콜라겐이 분해되면서 젤라틴의 형태로 변한다. 열이 가해지면 콜라겐 형태를 유지시키는 수소결합이 끊어진다. 결합이 해체된 콜라겐은 단백질 구조의 안정성을 잃고 불용성 단백질에서 물에 잘 녹는 가용성 단백질로 변성된다. 가용성 콜라겐은 수소결합이 해체되면서 함께 방출된 물에 녹아 젤라틴이 된다. 즉 열에 의해 콜라겐이 녹아 젤라틴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장 교수는 "결합조직을 구성하는 불용성의 콜라겐은 물과 함께 장시간 가열하면 가용성인 젤라틴으로 변해 용출된다"고 설명했다.

흘러나온 수분과 젤라틴은 고기를 속까지 균일하게 익힌다. 진공상태에서 추출된 수분과 젤라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기 조직 곳곳에 열을 전달해 속까지 고르게 익도록 돕기 때문이다.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 고기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다. 장 교수는 "진공 저온 조리법을 활용하면 진공 상태 덕분에 수분과 젤라틴이 보존돼 고기의 겉과 속을 고르게 익히고 연한 식감과 풍미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분자요리는 물리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과학 원리를 활용해 익숙한 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맛과 질감 그리고 형태를 새롭게 창조시켜 오감을 자극하는 조리 방법으로 음식계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 요리의 형태를 넘어 예술적인 감각이 더해지며 혁신적인 조리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최 교수는 "새로운 맛과 식감을 내기 위한 분자요리의 응용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맛과 식감의 미식 경험을 선사하면서 국내 외식시장의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모두가 만드는 대학, 각 주체 독립성 존중돼야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를 말해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흔히 대학사회의 '3주체'로 교수와 직원, 학생을 이야기한다. 이는 각 주체가 독립적으로 맞물려서 대학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과거부터 이 3주체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2015년 본교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를 받았을 때 학생과 교수협의회가 힘을 합쳐 총장에게 사퇴하라는 뜻을 전했다. 이후 총장의 사표가 수리돼 이들이 바라던 바를 이뤄냈다. 직원 또한 투표권 확대를 위해 지난해 꾸준히 학교법인 한성학원 측에 목소리를 냈다. 비록 요구사항이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대학에 이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다.

지금은 교수협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수회를 전임교원의 대표 기구로 규정하고, 교수회 의장이 총장이 된다는 『한성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다. 또한 교수회를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기구로 성격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원 측과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라고 지적했다.

총장은 대학의 운영과 재정, 교육, 인사 등 학내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자리다. 대학 전반을 관리해야 하는 총장이 교수회의 의장이 된다는 것은 교원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다.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기구의 의장이 총장이 되면 전임교원을 대표해서 하는 발언이 곧 총장이 하는 말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민주(民主)사회다.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교수협의회가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교수회를 전임교원 대표 기구로 성격을 전환하려 한다면, 교수협의회 측과 충분히 논의한 후 학칙을 개정해야 했다.

더군다나 총장이 교수회의 의장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교수 측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의견을 피력할 창구가 사라질 수 있다. 교수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교수가 학교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교수의 장이 총장이면 교수의 장이 곧 학교의 장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앞으로도 대학 3주체는 서슴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더 나은 대학사회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학 내 각 주체의 자율성 존중이 필요하다. 양질의 대학사회를 맞이하는 첫걸음은 대학 내 각 주체의 독립성 존중이다. 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조성하는 대학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김유성 편집국장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한빛 PD를 기리는 '이한빛 PD 8주기 추모제'가 지난 25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진행됐다. 이 PD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노동 착취였다. 인력 부족으로 이 PD는 하루에 20시간이 넘는 노동을 강요받았고, 정당한 대가도 지불받지 못했다. 'K-콘텐츠'라는 꽃은 활짝 폈지만, 방송계 노동권이라는 꽃은 여전히 만개하지 못했다. 이 PD 사망 이후 8년이 지난 지금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잔재한 갑질 문화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제작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 기사수첩 '속 빈' 풍자가 답아야 할 본질은

풍자가 퇴색된 시대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이 외국인 차별적 요소를 풍자의 소재로 삼으며 비판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하던 외국인 연예인의 서툰 한국어 발음을 흉내 낸 장면이 문제였다. 방송이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장면이 '풍자가 아닌 '조롱'이라는 지적이다.

풍자란 무엇인가. 풍자는 웃음을 활용해서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예술의 형태다. 단순 희화화가 아닌 대상에 대한 관찰과 논의, 교훈을 담아내며 문제 개선을 촉구한다. 풍자를 통해 유발된 웃음은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문제를 접하지 않은 대중에게도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킨다. 과거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는 비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풍자

했다. 먼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여의찮은 학생은 하루에 10시간씩 숙만 쉬고 일하면 학비를 '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비꼬아 시청자의 씁쓸한 웃음을 자아냈다.

문제가 된 풍자 방송은 논의나 교훈이 없는 빈 수레에 불과하다. 요란하게 가십만 생길 뿐이다. 진정한 풍자라면 연예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은 소속사를 비판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방송은 문제의 본질을 짚지 않고 가십을 형성할 수 있는, 만만한 대상에 또 다른 폭력을 가했다.

방송의 수익 구조에 굴종한 탓일까. 인물의 유명세만을 이용해 대중의 가벼운 흥미를 유발했다. 방송은 재방영과 유튜브 등을 통한 클립 영상의 조회수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광고주의 요구가 없다면 수익

이 끊기는 방송 광고 수익에 비해 안정적이다. 그렇다 보니 방송이 다루야 할 문제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고 대중의 입방아에 쉽게 오르내리는 콘텐츠로 조회수를 높일 방법만 간구한 것이다.

대중은 풍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대중도 풍자 콘텐츠가 비평해야 할 문제와 대상을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수익을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다. 비판할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지적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유하는 문제를 꼬집기 위해, 더 나은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자의 고민이 필요할 때다. 진정한 풍자 방송이 전파를 타고, 그로 인해 사회 문제를 더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또 고쳐나가는 그날을 고대해 본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낙산만평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낙산에 올라

“한국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갑압적 리더십? 권위적 리더십? 아니면 친화적 리더십이나 민주적 리더십?

21세기를 이끌어갈 바람직한 리더십은 섬김의 미학이 담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동방 순례(Journey to the East)』 소설 속 하인 레오의 모습에서 섬김의 미학을 발견할 수 있다.

주인공 헤르만 헤세는 진리와 빛의 근원이 존재한다는 동방으로 순례를 떠났다. 레오는 순례자들을 돕는 하인 중 하나였고, 짐을 나르거나 사사로운 심부름을 도맡았다.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노래도 부르고 휘파람도 불며 지친 이들을 위로해 줬다.

순례는 순조로웠으나 모르비오 협곡에서

나는 하인이다

레오가 사라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레오가 사라진 순간부터 순례자들은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한 것이다. 주인공인 헤르만 헤세 또한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결국 동방으로의 여행은 그렇게 끝이 났다.

순례가 중단되고, 헤르만 헤세는 몇 년을 찾아 헤맨 끝에 하인 레오를 다시 만나게 된다. 다시 만난 레오의 모습은 큰 충격을 안겨줬다. 순례집단의 하인으로 참여했던 레오가 사실은 교단의 최고 책임자이자 정신택 지주였던 것이다.

레오는 말한다. “오래 살기를 원하는 자는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야심만으로 지배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무(無)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 레오는 리더이기 전에 서번트(하

인)이었다. 『동방순례』 소설 속 레오의 모습은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섬김과 봉사정신을 강조한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이다.

즉 위대한 리더란, 구성원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줌으로써 구성원들이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장 낮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도 레오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본연의 서번트 의식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뒤에서 봉사하는 '서번트 리더'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김민하(사회과학 3)

■ 의화정

나를 위한 투자

비트코인과 엔비디아는 단기간의 높은 수익률을 단숨에 주목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무려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고, 엔비디아 역시 약 4배에 달하는 성장성을 이뤘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보면 “나도 여기에 투자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언제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수많은 전자회사가 생겼다가 사라졌고, 엔비디아 외에도 실패한 테크 기업들이 많았다. 만약 그런 곳에 투자했다면 큰 손실을 겪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바로 자기 자신, 즉 자기 능력 개발이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핵심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AI)이다. 과거 컴퓨터와 핸드폰이 세상을 바꾸었듯, 이제 AI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컴퓨터는 아날로그 세상을 디지털로 바꿈으로써 업무의 속도를 높였고, 핸드폰은 손 안에서 모든 작업을 가능하게 하여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이제 AI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지시하기 전부터 미리 생각하고 예측하는 방식으로 기술의 새로운 차원의 제로의 영역을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AI는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비즈니스, 연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AI 세상을 대비하여 자기 자신에게 기술적 능력을 쌓는 투자야말로 개인의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져오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서는 확실한 성공을 이루기 어렵다. 기술은 단지 효율성을 위한 도구일 뿐,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결국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함으로써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성공을 이끌어내는 핵심 원동력이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되, 사람의 본질적 요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함께 갖추는 것이 진정한 성공을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동훈(시용융학과) 교수

**한성대신문 오피니언면은
학내구성원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70과 85 사이 경계에 갇힌 사람들



〈편집자주〉

'122조 3779억원' 해당 금액은 2024년에 상정된 복지 예산이다. 매년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생겨난다. 경계선 지능인 역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중 하나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보다 IQ가 조금 높다는 이유로 여러 지원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다만 경계선 지능인을 마냥 IQ로만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성격을 갖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경계선 지능인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다. IQ가 70 이하이면 지적장애, 85 이상이면 일반인이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그 사이인 71~84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된 바 없다. 다만 IQ 정규분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3.59%가 IQ 71~84 구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약 697만 명이 있을 것에 달하는 수치다.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그럼에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해 이들은 사회의 사각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본지는 경계선 지능인이 처한 상황과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기사를 송고한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경계선 지능인', IQ 71~84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느린 학습자'라 불리기도 하는 이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미국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이하 DSM)'에 따라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 구간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인식되나,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윤경(한국공학대학교 대학공유협력센터) 연구교수는 "경계선 지능인은 일부 영역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일상적인 사회 활동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별도로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년층 사이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은 다수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 의심 대상자 위험군은 19~29세가 11.3%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약 93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다. 최 연구교수는 "청년층은 성인으로서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이자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청년 경계선 지능인은 대인관계 형성 경험 부족으로 더 큰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대체로 학습과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특성을 갖는다. 이들은 집중력, 기억력, 고차원적 사고, 추론 능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배움의 속도가 느리고 고등교육 과정으로 올라갈수록 학업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낮은 자존감과 불안함을 느끼고, 대인관계가 서투르며 협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최진오(국립중앙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은 머릿속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공간이 협소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은 각자 공통분모를 갖기도 하지만 IQ 구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IQ가 71에 가까운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84에 가까운 이들은 평균 지능을

갖는 사람들과 유사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홍성두(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은 IQ에 따라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며 "IQ가 84에 가까운 경계선 지능 학생은 학교 교육과정을 따라오기 비교적 쉽지만, 71에 가까운 학생은 버거워한다"고 전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을 통해 기준에 지니고 있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관련 치료를 받은 경계선 지능 아동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프로그램 실시 전후 각각 9%, 30% 향상됐다. 최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은 일정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경계선 지능인을 정의하는 합의된 기준이 없어 혼란을 빚는 문제가 있다. 여러 연구와 정책에서 ▲경계선 ▲경계선급 지적기능성 ▲경계선급 지능 ▲느린 학습자 ▲학습지원 대상 학생 등 구체적인 정의 없이 많은 이름으로 혼용되는 현 상황은 대중들의 잘못된 용어 사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의사소통의 오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위험을 갖는다. 최 연구교수는 "용어들의 불명확성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일관된 지원 체계 구축을 어렵게 만든다"고 답했다.

경계선 지능인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의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아 이들이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은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활동서비스, 재활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지원받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동법에서 정의하는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서윤(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교수는 "장애등록이 돼 있는 청년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취업 공고를 제공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논했다.

법률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학습 부진에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 이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의 교육제도에서는 평균 지능을 갖는 학생과 동일한 교육을 받는다. 경계선 지능인은 또래 학생에 비해 발달이 느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뒤쳐질 수밖에 없다. 변민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학급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계선 지능인이 초·중·고등교육기관에서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다 보니 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 및 근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계선 지능인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경계선 지능인의 고립 및 은둔 문제가 나타난다. 특히 청년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고립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불러일으켜 국가적으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서윤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 이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며 "반복된 실패로 학습된 무기력감, 우울감, 불안과 공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계선 지능인의 정의가 불명확한 원인으로 DSM의 기준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꼽힌다. 본래 미국에서는 지적장애 진단 기준을 지금의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구간인 IQ 84까지로 설정했다. 이로 인해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인원이 매우 많아져 IQ 70 이하로 진단 기준을 변경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진단 기준을 들여와 경계선 지능인의 정의가 불확실한 채로 통용되고 있다. 최진오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의 정의를 담은 외국 기준을 사전적인 고려 없이 가져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개별화된 프로그램과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정부에서 지정한 장애인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의 기준이 IQ 70 이하이고, 경계선 지능인은 그 이상의 IQ에 속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지원 대상에 속할 수 없다. 변 선임연구위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비장애인 고용지원 체계에서 적절한 성과를 얻기 힘들고 장애인 등록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을 단순히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으로 분류시킨다는 이분법적 접근이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교육기관에 확보돼 있는 학급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단 2개뿐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인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학급에서 또래 학생들에 비해 학습 속도가 뒤처지고 특수학급에서 지적장애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최승숙(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의 중간지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청년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바리스타 또는 제과·제빵에 한정돼 있

어 정착 체할 수 있는 직군의 폭이 넓지 않다.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선택 가능한 직군의 종류도 자연스럽게 적어질 수밖에 없다. 최승숙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직군 체험이 다양하지 않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경계선 지능인의 기준을 마련해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계선 지능인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IQ도 국가별로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계선 지능인의 기준을 정의할 때 IQ뿐만 아니라 행동적 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최 연구교수는 "경계선 지능인을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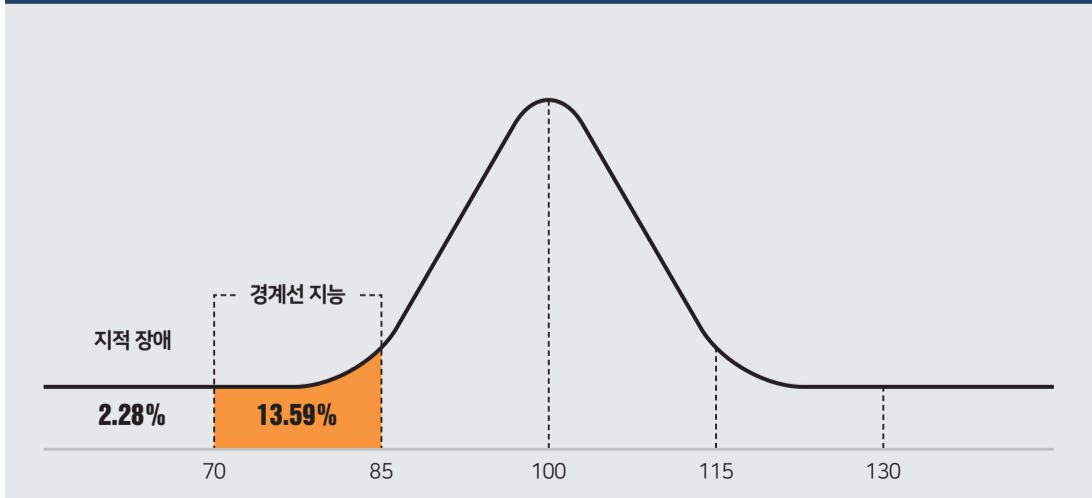
경계선 지능인도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활동서비스나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에 국한된 방식이 아닌 교육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반학급에서 또래 학생들의 학습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최승숙 교수는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처럼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거나 코칭이 필요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 교육의 개선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직무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정 분야에 국한된 진로 체험의 방식이 아닌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등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 힘들어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는 소수 인원으로도 직업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투입시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전문 실행사 직업훈련'을 통해 사무·판매·요양·요리·청소·목공 등 다방면에 걸쳐 경계선 지능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최승숙 교수는 "프로그램 내 직군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을 함께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전언이다. 사회에서의 적응을 어려워한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태도를 갖기보다는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태도가 요구된다는 뜻이다. 최서윤 교수는 "무엇보다 사회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며 "차별적 시선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친구이자 동료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능지수(IQ) 정규분포 곡선



*출처: 미국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